

2000년대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성에 관한 연구: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전재호 | 서강대학교

| 국문요약 |

2000년대 중반 뉴라이트는 기존 보수세력의 혁신을 주장하며 등장했다. 그들의 이념적 특징은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의 정치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 특히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신뢰했다. 둘째, 엘리트주의의 입장에서 참여민주주의를 비판하고 평등과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셋째, 통일과 민족주의를 동일시하면서 민족주의 극복을 주장했지만 자신들은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정치적’ 민족주의를 지녔다. 넷째,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규범을 동원하여 북한을 비판함으로써 반공주의의 강조점을 변화시켰다. 첫째와 둘째 특징은 기존 보수세력과 차이가 없는데 비해, 셋째와 넷째 특징은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뉴라이트는 한국 보수주의에 약간의 변화만 가져왔을 뿐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주제어 | 뉴라이트,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탈민족주의, 비지유주의적 민주주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한국사회과학 연구지원사업, SSK)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011).

I. 들어가는 말: 뉴라이트의 등장과 소멸

이 글은 2000년대 중반 보수의 혁신을 내걸고 한국 사회에 등장했던 뉴라이트를 통해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성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철학적 보수주의를 자신들의 이념으로 발전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¹⁾ 물론 대한민국은 냉전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건국 직후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내세웠고, 1960,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을 ‘조국근대화’ 과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발전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강조했다. 따라서 권위주의 시기 보수 세력의 핵심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는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였다.²⁾

그런데 1987년의 민주화와 1980년대 후반 탈냉전의 도래라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는 보수 세력에게 이념의 변형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탈냉전은 반공의 절대성을 약화시켰고, 민주화는 국가주도의 ‘중상주의적’ 발전주의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반공주의를 완화시켜 북방정책을 전개하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전개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 등을 계기로 냉전 반공주의로 회귀하여 ‘흡수통일론’ 또는 ‘북한 붕괴론’을 주장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과 노동세력의 성장에 힘입어 중상주의적 발전주

-
- 1) 강정인은 “해방 후 남한에서는 근대화를 위해 과거의 전통과 역사로부터 ‘철저한’ 단절을 추구하는 보수 세력이 근대화를 앞장서서 추진했고, 그 결과 그들은 … 서구와 같은 철학적 보수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었다”(강정인 2009, 47)고 지적한다. 함재봉도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란 없다. 이것은 국내외의 모든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철학적, 정치적, 정책적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함재봉 1999, 199). 그래서 1990년대까지도 한국의 보수주의는 철학적 내용이 없거나 보수주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 2) 김병곤은 “해방 이후 권력을 장악한 보수세력이 시대의 변화를 넘어 일관적으로 갖게 된 이념적 특징은 반공주의”였고, 민주화 이후에도 “보수세력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다(김병곤 2011, 28).

의는 약화되었지만, 1990년대 초반 경제가 침체되자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의 추진을 내세워 다시 발전주의를 강조했다. 다만 이 발전주의는 국가개입을 당연시 하던 과거와 달리 국내외 자본의 압력으로 인해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었다. 이렇게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도 보수 세력은 여전히 반공주의 및 신자유주의와 결합된 발전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지녔다.³⁾

그런데 이러한 보수 세력의 이념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그들의 대북화해정책이었다.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확산되고 북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자 2000년대 초반 보수 언론과 보수적인 종교, 시민단체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친북’정책으로 성토하고 국가보안법 수호를 주장했다(민병호·나기환, 2007, 24). 이러한 ‘보수적 행동주의’는 보수 세력을 결집시켰지만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냉전적 반공주의에 기초한 사고였다.

보수 세력의 이념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04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보수 세력, 곧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⁴⁾ 그들은 전향한 386세력과 교수, 전문직업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서, 기존 올드라이트와 달리 보수의 혁신을 주장하면서 보수 시민단체를 결성했다.⁵⁾ 뉴라이트 세력의 대표적인 단체였던 ‘자유주의 연대’의 대표인 신지호는 자신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올드라이트와 비교하여 설명했다.

3)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의미하므로 발전주의와 결합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했고 그것이 실패하여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4) 뉴라이트(The New Right)는 1970년대 등장하여 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으로 나타난 이념으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가 결합되었다. 두 이념 사이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긴장이 존재하지만, 강하지만 최소한의 정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결합될 수 있었다(앤드류 헤이우드 2009, 105).

5) 보수적 성향의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의 뉴라이트 단체 대표 및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라이트의 평균치는 ‘우리 사회의 좌편향 현상을 극히 우려하는 40대 전문직, 북한의 핵보유와 김정일 체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다(민병호·나기환, 2007, 15).

올드라이트가 국가주의, 권위주의에 바탕을 두었다면, 뉴라이트는 한국형 자유주의와 애국적 세계주의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다. 올드라이트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큰 정부’를 지향한 반면, 뉴라이트는 ‘시장주도형 경제성장-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정치면에서 올드라이트가 개발독재를 실시했다면, 뉴라이트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대북정책에서 올드라이트가 수세적인 반공절대주의를 내걸었다면, 뉴라이트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민주화와 자유통일을 추구한다(신지호 2006, 170).

뉴라이트라는 용어는 동아일보가 확산시켰는데, 그들은 2004년 11월부터 기획 기사를 연재하면서 뉴라이트를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집단”, “합리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범보수·중도그룹”으로 규정했다.⁶⁾ 동아일보는 뉴라이트의 이념적 범주를 보수 뿐 아니라 중도 그룹까지 확대하려 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뉴라이트를 올드라이트와 달리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매우 강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민병호·나기환. 2007, 25).

2000년대 중반부터 뉴라이트는 보수 세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년여 동안 보수 언론의 지원에 힘입어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앞세운 많은 단체들이 결성되었다.⁷⁾ 특히 뉴라이트는 조직 차원에서 올드라이트와 달리 대중화와 전문화에 성공했다. 2005년 11월 김진홍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뉴라이트의 대중화’를 기치로 내걸고 ‘뉴라이트전국연합’을 출범시켰고, 전문분야별, 지식인 중심의 시민 단체들은 자유주의연대를 중심으로 ‘뉴라이트 네트워크’를 결성했다.⁸⁾

뉴라이트가 보수 세력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전문

- 6) 동아일보는 2004년 11월 8일부터 이듬해 2월 23일까지 4부 25회에 걸쳐 뉴라이트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 7) 의료와 사회포럼, 한미관계비전 21포럼, 21세기 지구넷, 자유주의 연대, 기독교사회책임, 헌법포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교과서포럼, 뉴라이트 싱크넷,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폴리젠 등이 대표적인 단체였다(민병호·나기환. 2007, 29~30).
- 8) 홍진표는 뉴라이트가 노선과 정책에서 단일한 집단이 아니고, 처음부터 뉴라이트전국연합과 뉴라이트네트워크는 상호연계가 없는 그룹이라는 입장을 취했다(홍진표 2009).

지식을 근거로 참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을 뿐 아니라 여러 쟁점에 대한 보수 세력의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무현 정부가 성장보다 분배, 경쟁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좌파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신자유주의의 모토인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주장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포용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대량살상무기의 근원적 해결을 주장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성공한 산업화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기 비하적 역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과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출간했다(강정인 2009, 106). 더욱이 뉴라이트는 2007년 선거에서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뉴라이트 정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보수정부를 위한 정책비전과 대안을 담은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를 출간했다.

그런데 2008년 보수 세력이 지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1년 사이에 뉴라이트는 상당히 큰 변화를 겪었다. 우선, 자유주의연대는 2008년 4월 뉴라이트재단과 통합을 결의하고 10월 ‘(사)시대정신’으로 개칭했고 그들이 중심이 되었던 뉴라이트네트워크는 2008년말로 해소되었다. 또한 뉴라이트전국연합도 대선 이후 회원 수가 급감했고 김진홍 목사를 비롯한 핵심세력들이 이탈했다. 게다가 뉴라이트라는 명칭을 내건 단체들이 전국연합과 산하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라졌다(홍진표 2009). 둘째,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뉴라이트 출신의 인사들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진입하거나 또는 인권대사, 법제처장, 청와대 행정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이명박 정부에 의해 기용되었다.⁹⁾

9) 한나라당 공천으로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뉴라이트 인사들은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 박영아 자유주의교육연합 정책위원장, 김성희 뉴라이트전국연합 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 장제원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등이 있고,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는 인권대사로,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는 법제처장으로, 박영모 전국연합 조직국장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한오섭 전국연합 기획실장은 청와대 언론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되었다. 또한 ‘역사 바로세우기’(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박정희 긍정적 재평가)를 주도했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7년 9월부터 1년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중도실용주의, 선진화, 비핵개방 3000 등 정부·여당의 주요정책의 골자를 마련했고, 뉴라이트 재단 이사를 지낸 홍진표 시대정신 편집인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그래서 2009년 뉴라이트의 대표 인물이었던 홍진표는 뉴라이트의 잡지인 <시대정신>에 「뉴라이트의 추락과 재생」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뉴라이트의 신뢰 급락이 2008년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 하락에 기인하며, 그것은 뉴라이트가 ‘MB정권의 행동대’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뉴라이트 그룹이 단일하지 않고 용어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해를 낳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시대정신이 본래 의미의 뉴라이트의 사상과 노선을 계승했으니, 국민통합과 북한민주화를 지향하는 ‘제2기 뉴라이트운동’을 지켜볼 것을 부탁했다(홍진표 2009).

그러나 이후에도 ‘제2의 뉴라이트’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2011년 3월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의 주용중 기자는 「추락한 뉴라이트의 대안은 뭔가」라는 논설에서 “요즘의 우파 진영과 5년 전의 우파 진영을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뉴라이트의 쇠락”이며, 앞의 홍진표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가 “뉴라이트의 거듭남을 희망했지만 그 후에도 뉴라이트는 날개도 없이 계속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파 진영 입장에서 쓸쓸한 것은 뉴라이트를 대체하거나 뉴라이트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주용중 2012년 3월 23일). 이는 뉴라이트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몰락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뉴라이트의 몰락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원인이 제시되었다. 주용중은 “시대의 변화와 같은 객관적 요인보다는 리더십 부족과 분열 등 주체적 요인이 더 크”다고 평가했고, 『뉴라이트 사용후기』(2009)를 집필한 한운형은 뉴라이트가 정권 비판 인사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했고, 이명박 정부의 탄생으로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여 더 이상 이념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우익의 통합적 정체성을 채우려는 뉴라이트 의도가 좌절되었다고 지적했다(위클리경향 2012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전개된 보수 세력들의 활동을 보면 사실상 조직적 차원에서 뉴라이트라는 집단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뉴라이트가 주장했던 이념 또는 정신을 계승하는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민주

으로 임명되었다(위클리경향 2012.7.1).

화와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기존의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단체들은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뉴라이트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이념적이고 지적인 유산은 상당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뉴라이트의 이념을 다루는 것은 당대 뿐 아니라 현재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이 글은 뉴라이트가 주장했던 이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그리고 그들이 한국 보수주의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고찰한다. 물론 2000년대 중반 활동했던 뉴라이트 세력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질적 집단으로 보기 힘들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은 자유주의연대와 뉴라이트네트워크 등 지식인 집단이 내세운 뉴라이트의 이념에 동조했기 때문에 뉴라이트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따라서 이 글은 뉴라이트의 이념을 주도했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념을 고찰한다.¹⁰⁾

뉴라이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상당히 많다. 그것들은 주제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되는데, 첫째,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뉴라이트의 비판에서 촉발된 역사교과서 논쟁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2005년 교과서포럼은 『한국 현대사의 허구와 진실』을 출간하여 금성교과서를 비판했고, 이에 대해 ‘진보적’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비판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교과서포럼 2005). 특히 교과서포럼이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간하자 진보적 역사학자들은 『뉴라이트 비판』,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뉴라이트 사용후기』 등의 단행본과 다수의 논문들을 통해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비판했다(교과서포럼 2008; 김기협 2008; 역사교육연대회의 2009; 한윤형 2009). 물론 이에 대한 뉴라이트 진영의 재비판도 등장했다(최홍재 2007). 그러나 이 연구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¹¹⁾ 또한 역사교과서 관련 연구들은 한국 근현대사에만 집중했기

10) 이 글은 뉴라이트의 이념을 대표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했지만, 과연 그들이 뉴라이트의 이념을 대표하느냐의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1) 이에 비해 전재호는 양자의 시각차를 ‘대한민국 중심의 정체성’(뉴라이트)과 ‘한민족 중심의 정체성’(진보적 역사학자들)의 충돌, 곧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온 한국 민족주의의 균열이라는 시각에서 비교 연구했다(전재호 2010).

때문에 뉴라이트가 지닌 이념의 일부분만을 보여준다.

둘째, 뉴라이트 단체들의 활동을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윤희는 대응사회운동의 사례로 그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평가했고, 정상호는 미국의 신보수인 네오콘과의 비교를 통해 미국과 한국정치의 특성과 동학을 설명했다(이윤희 2005; 정상호 2008). 그러나 이윤희는 뉴라이트 등장 초기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의 모습을 다루지 않았고, 정상호는 미국 네오콘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뉴라이트의 이념이 지닌 여러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

셋째, 이 글의 주제인 뉴라이트의 이념을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정해구는 뉴라이트의 현실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고, 강정인과 김병곤은 한국 보수주의의 흐름이라는 맥락에서 뉴라이트의 행태와 담론을 분석했다(정해구 2006; 강정인 2009, 김병곤 2011). 그러나 정해구는 시기적으로 2006년까지만 다루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뉴라이트의 이념을 다루지 못했고, 김병곤 역시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뉴라이트를 간략히 다루었다. 강정인은 한국 보수주의의 맥락에서 뉴라이트의 이념을 심층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뉴라이트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이념을 간략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글은 뉴라이트 운동이 소멸하면서 그들의 이념적 유산을 관찰할 수 있는 시기에 연구되는 만큼 기존 연구들보다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뉴라이트의 이념적 특징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념을 이어받아 현재에도 활동하는 단체들을 고려하여 그들이 이념적 특징을 다룬다. 이 글의 구성은 2장에서 뉴라이트의 이념과 그 특성을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로 나누어 고찰하고, 3장에서는 한국 보수주의의 흐름에서 뉴라이트가 지닌 의미를 정리한다.

II. 뉴라이트의 이념과 그 특성

신지호는 뉴라이트의 사상적 특질을 자유주의와 애국적 세계주의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이 장에서는 그들이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애국적 세계주의 대신 그 개념을 포괄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특성을 고찰한다(신지호 2006a).

1. 자유주의 강조: 신자유주의 맹신

이영훈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자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곧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체제를 국제(國制)의 기본으로 출발”했음을 강조했다(이영훈 2008, 217~223).¹²⁾ 이는 뉴라이트의 핵심 이념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주의임을 보여준다. 특히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유주의를 가장 강조했다.

저는 뉴라이트 운동을 선진화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어 있는 21세기 초 한국 사회에서 선진화에 불가피한 사상적 기초인 **자유주의**(강조는 필자)를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문화의 모든 방면에 걸쳐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고자 하는 한국사에서 처음 있는 사상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안병직·이영훈 2008, 331).

뉴라이트가 자유주의를 강조한 데 대해 정상호는 보수의 혁신을 내걸었던 뉴라이트가 자신들의 이념을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로 내세운 것은 보수주의

12) 이영훈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서 교과서포럼이 집필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 필자이자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인식에서 뉴라이트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평가와 인식을 반영했기 때문이고, 자유주의는 “과거의 보수 세력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이념적 표식”이자 “진보 진영과의 사상적 담론 경쟁에서 선점 효과를 의도한 이념적 무기”라고 해석했다(정상호 2008, 175~176).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뉴라이트의 진술적 의도를 드러냈지만, 자유주의에 대한 그들의 강조를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진정으로 자유주의를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가치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뉴라이트는 자유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영훈을 자유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분별력 있는 이기심을 본성으로 하는 인간에게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해 주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여하면 시장의 경제적 성취는 최적 상태에 이른다는 경제학의 오래된 신념체계가 자유주의입니다(안병직 · 이영훈 2008, 329~330).

이 진술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영훈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이 정치적 측면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자유주의를 경제학의 신념체계로 정의한 점이다. 그는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는 시장경제의 바탕으로서 경제성장의 기초적 조건”인데,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이영훈 2007, 221). 물론 그도 “대한민국의 커다란 역사적 의의”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는 점을 제시했다(이영훈 2007, 217).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 사유재산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의미하는 자유주의는 정치적 측면이 거세된 경제적 측면의 자유주의였다.

이렇게 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은 뉴라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였던 자유주의 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들은 한국사회를 자유주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국가주도형 방식에서 시장주도 방식(작은 정부-큰 시장)으로서의 경제시스템 전환을 통해 2만 달러 시대를 개척하며, 둘째, 자유무역협정의 능동적 추진을 통해 ‘통상대국’을 건설하며, 셋째,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만민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문화를 창출하며, 정부(淸富)를 권장하며 빈부격차의 해소가 아니라 빈곤의 해소를 추구할 것을 제시했다(정해구 2006, 221~222).

신지호도 “뉴라이트 사상은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념으로 … 대한민국 헌법의 규범적 가치”라고 주장했다(신지호 2006a, 4). 또한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 우파의 혁신”이고 그 핵심 콘텐츠 중 첫 번째를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한 구(舊) 우파의 국가주의, 권위주의를 자유주의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국가주도형 중상주의 시스템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3만 달러 시대 개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력을 중시하는 시장주도형 자유주의 시스템만이 그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지호 2006b, 164). 곧 그는 미래에 필요한 자유주의를 ‘시장주도형 자유주의’로 주장했다.

자유주의 연대의 핵심인물인 이재교도 2005년 말 월간 『말』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분배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빈부 격차가 감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가진 자들이 투자를 더 꺼리게 되고,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서민 계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또 세금도 감면하는 등 가진 자들의 활발한 투자를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는 것이 “진짜 복지고 분배”라고 주장했다(강정인 2009, 107~108). 그도 빈부격차라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정부의 시장 불개입과 세금 감면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제시했다.

결국 뉴라이트는 자유주의가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이자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화를 추진하는 사상적 기초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의 핵심 이념으로 내세웠다. 자유주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지닌 특징은 정치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서구의 뉴라이트와 동일하게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를 맹신했다는 점이다.¹³⁾

13) 물론 이영훈은 신자유주의가 “사상과 철학의 기본 체계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그것

한편 뉴라이트가 강조한 자유주의는 주로 경제적 측면이었지만, 드물게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를 비판할 때는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을 기초로 관용과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선악의 이분법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비(非) 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나만이 옳다’는 ‘정의의 사도’ 의식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걸림돌이다. 독선, 편협성, 응졸함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최대 특징이다(신지호 2006b, 187).

신지호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을 기초로 관용과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선악의 이분법에 기초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혁신 우파는 관용과 상생을 특징으로 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노무현 정부는 독선, 편협성, 응졸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규정했다. 이러한 논법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노무현 정부를 ‘반자유주의’ 세력으로 공격하기 위한 레토릭이었다.

노무현 정권이 내건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절정은 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직후 나타났다. 1987년 민주화투쟁의 산물이자 입헌주의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수구 헌재’로, 그 결정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쿠데타’로 매도한 집권 민주화세력은 자신들이 반자유주의세력임을 스스로 폭로했다. 이후에도 그들은 신문법, 사학법 등 자유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냈다(신지호 2006a, 5).

과 구분되지 않”는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안병직 · 이영훈 2008, 330).

이렇게 뉴라이트는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했지만, 이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한 것이었다.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관용과 상생을 특징으로 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뉴라이트는 경제적 차원에서 자유주의를 자신들의 핵심 이념으로 지냈고, 그것은 특히 신자유주의를 의미했다. 그리고 그들은 노무현 정부를 반자유주의 세력으로 비판할 때만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주의를 언급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이 현실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의 자유주의 인식의 특징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임을 보여준다.

2. 민주주의 회의: 평등보다 자유, 참여민주주의 비판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체제를 국제의 기본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영훈 2008, 223). 하지만 앞절에서 보았듯이 뉴라이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만을 강조했다. 그러면 그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1) 평등보다 자유의 강조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이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선포한 것에 대해 문명사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높게 평가했다(이영훈 2007, 219).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를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비판했던 신지호의 주장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뉴라이트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뉴라이트 싱크넷 섭외위원장 조성환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사이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법치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두 골간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선천적으로 친화적인 것이 아니”며, “민주화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

지만 자유주의가 만개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의 집단주의적 압력”, 곧 ‘민족’과 ‘평등’의 요구로부터 도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조성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통일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민족이라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곧 두 정권의 통일 드라이브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민족’이라는 집단가치가 ‘자유’라는 개인가치를 압도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분위기는 민족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희생해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하였다”고 비판했다(안세영 외 2007, 31~32).

다음으로 조성환은 “민주화 이후의 좌파정권, 특히 노무현 정부는 단순히 기회평등주의가 아니라 결과평등주의의 차원에서 ‘평등’을 맹목적으로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이전과 수도권의 인구와 시설을 강제 분산시키는 거시적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득권 해체를 모토로 한 각종 증세정책과 개혁입법 등을 ‘평등’의 이름으로 적극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곧 “노무현 정부에 들어 한국사회의 자유와 자율은 위축되고, 평등과 개입은 확대되었으며 사회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안세영 외 2007, 33~34).

결국 조성환은 “민족과 평등의 압도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제도인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안세영 외 2007, 34~35). 다시 말해 그는 노무현 정부가 민족과 평등을 앞세운 대북포용정책, 수도이전정책, 증세정책, 개혁입법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및 그 본질적 제도인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는 뉴라이트의 전형적인 주장으로 다른 학자들에게도 볼 수 있다.

안병직도 한국사회가 선진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과도한 민족주의와 집단적 평등주의를 지적했다. 그 사례로 그가 제시한 것은 첫째, 사회의 반기업·반재벌 정서가 꽤 심각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그는 기업의 본질이 기술 혁신과 이윤창출인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것을 이윤의 사회적 환원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그는 국민 다수가 수도이전 문제에 환호한 것이 “우리 국민의 심성에 내재한 평등주의적 성향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셋째, 교육 평준화나 비정규직 철폐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평등주의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발전하여 드디어 사회가 국가를 약탈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훈도 “한국인이 극복해야 할 마음의 병”을 과도한 민족주의, 무분별한 통일논의, 집단적 평등주의로 제시하고 자유주의가 “병을 고치는 약재”라고 주장했다(안병직·이영훈 2008, 328~329).

결국 뉴라이트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만연한 평등(또는 평등주의)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결과로 인식하고, 그것을 자유와 대비시키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집단적 평등주의’를 ‘한국인이 극복해야 할 마음의 병’으로 비판하면서 그 ‘병을 고치는 약재’로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이는 그들이 민주주의 또는 평등을 부정적으로, 반면 자유주의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참여민주주의를 다루는 다음 절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2) 참여민주주의 비판: 포퓰리즘 극복과 법치주의 확립

뉴라이트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인 류근일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상황을 “참여민주주의를 빙자한 난장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참여(participation)를 투표행위·정당활동·각종 지역활동 등의 ‘통상적 참여’(conventional participation)와 폭력을 수반하는 점거·농성·시위 등의 ‘비통상적인 참여’(non-conventional 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6.29 이후 후자가 전자를 누르고 특권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행동이 마지막 저항수단이 아니라 일상화, 권력화되고 있”으며, 그 사례로 “이익집단, 생계형 집단이 법을 우습게 하는 ‘집단 떼쓰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류근일·홍진표 2005, 283). 또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폭민정치, 참주정치를 인용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일탈 민주주의, 폭민 민주주의로까지 타락했다”고 평가했다(류근일·홍진표 2005, 284). 곧 류근일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비통상적인 참여’를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게다가 그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통상적 참여’와 함께 ‘통상적인 참여’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참여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했다.

유근일과 대담을 진행한 홍진표는 참여민주주의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민주주의가 “반드시 직접민주주의여야만 한다는 일종의 도그마와 같은 주장”이고, “공직선거공천도 대의원과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한다거나 주요 당직 선출에 있어서도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진성당원제와 노사모를 사례로 들면서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노사모 소속 사람들이 마치 여당의 당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 버려서 공천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한다면 상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류근일·홍진표 2005, 285). 곧 홍진표는 공직선거 공천이나 정당 선거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을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논리로 직접민주주의를 비판했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뉴라이트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급속히 성장한 시민단체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류근일은 모든 정치조직은 운명적으로 과두체제화한다는 로버트 미헬스(Robert Michels)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 법칙이 시민운동과 국민 직접참여 운동에도 일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운동이 “기업에서 돈을 뜯어간다거나, 각종 정부기관을 통해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받아간다”고 주장했다(류근일·홍진표 2005, 286). 홍진표 역시 이에 동조하면서 “문제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견제세력도 감시세력도 없다”고 주장했다(류근일·홍진표 2005, 287). 게다가 류근일은 현재 대중의 집단행동이 폭력, 협박, 공갈을 수반하는, 곧 법치를 압도하는 단계에까지 갔으며, 그것을 노무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류근일·홍진표 2005, 288).

조성환도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가 “대의제와 절차민주주의의 기본구도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곧 “참여정부는 의도와는 달리 ‘민주주의 과잉’에 의한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하면서 “과잉민주주의만큼이나 민주주의를 쉽게 옥죄는 것이 없다”는 보비오(N. Bobbio)의 지적은 노무현 정부를 거친 한국 민주주의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정치적 명제라고 주장했다(안세영 외 2007, 34~35).

결국 뉴라이트는 참여민주주의(또는 직접민주주의)를 대의제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구도를 흔들다는 논리로,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를 법치를 위협한다는 논리로 비판했다. 또한 이 논리에 근거하여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참여민주주의(또는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확산시켰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뉴라이트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를 포퓰리즘의 논리로도 비판했다.

지금 우리는 민주화의 완성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하는 기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참여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강화된 대중선동형 포퓰리즘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의회주의는 곧잘 무시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심화된다면,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토크빌을 비롯하여 많은 정치사상가들이 우려하였던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신지호 2006b, 185).

신지호는 참여민주주의를 내건 노무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법치주의, 입헌주의, 의회주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 다수의 폭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있고 “선거를 통하여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보가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어떤 권력자도 법 앞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자유민주주의는 성숙”되며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선진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성찰적 민주주의를 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 “선진화 세력의 민주주의는 이 모든 문제점을 극복한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온전한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지호 2006b, 191~192).

또한 신지호는 선진민주주의 실현의 대안으로 성찰적 민주주의의 개화와 법치주의의 온전한 실현 및 속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장했다.

참여민주주의를 앞세워 모든 권위와 학력 그리고 전문가정신을 파괴하는 다중의 힘에 의한 중우정치를 지양하고 사려 깊은 고찰을 통해 사회적 공동

선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여 실천하는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신지호 2006b, 192).

신지호는 참여민주주의를 다중의 힘에 의한 중우정치로 규정하고 속의민주주의는 사려깊은 고찰을 통해 사회적 공동선을 모색,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런 참여민주주의와 속의민주주의를 선악으로 대비시키는 논리 역시 노무현의 참여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수사였다.

결국 뉴라이트는 참여민주주의를 자신들이 부정적으로 정의한 직접민주주의 및 대중선동형 포퓰리즘과 등치시킨 데 비해, 선진민주주의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법치주의, 성찰적 민주주의, 속의민주주의 등과는 대비시켰다.

3. 민족주의 탈피: 근본주의와 집단주의 비판

뉴라이트의 민족주의 인식을 잘 볼 수 있는 사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며 등장한 ‘교과서 포럼’이다. 그들은 당시 사용되던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존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들은 뉴라이트 등장 초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으로 대안 교과서를 출판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주도적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과서 포럼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그들이 민족주의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¹⁴⁾ 2008년 교과서 포럼이 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책임편집자인 이영훈은 민족주의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대안적 역사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4) 신지호는 뉴라이트 사상의 두 번째 특질로 세계주의(globalism)를 주장했다. 그는 “세계주의를 당연히 민족주의(nationalism)의 대립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뉴라이트는 탈민족주의를 지향한다고 주장했다(신지호 2006a, 6).

대안적 역사관의 출발점은 역사의 기초 단위로서 민족을 해체하고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대로 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온 초역사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민족은 20세기 들어 일제의 억압을 받는 가운데 한반도의 주민들이 발견한 정치적 공동체의식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게 이전에 언젠가 생겨난 것이 만큼 앞으로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민족입니다(이영훈 2007, 316).

여기서 이영훈이 역사의 기초 단위로 제시한 민족은 식민지 시기 발견된 ‘상상된 공동체’이자 미래에 사라질 수 있는 단위이다(이영훈 2007, 20). 이러한 시각은 민족을 근대에 등장한 역사적 실체로 인식하는 ‘근대론’(modernism)으로서, 원초론(primordialism)의 입장에 가까운 민족주의 역사관과 크게 차이나는 점이다.¹⁵⁾

이러한 시각에 따라 이영훈은 민족을 역사의 단위로 설정한 ‘민족주의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민족보다 “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역사의 단위”인 ‘개별 인간’에 초점을 맞춘 ‘문명사의 시각’에서 20세기 한국사를 볼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인간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또 상호 협동하면서 건설해 가는 생산과 시장과 신뢰와 법치와 국가의 역사가 진정한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각으로 보면 “민족사에만 초점을 맞출 때와는 상이한 역사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로 그는 식민지 시기를 제시했는데, 당시 “독립운동이 중요”했지만 “그것만이 역사의 전부가 아”니고, “해방 이후 국민국가를 건설할 주체로서 근대문명을 이해하고 실천할 능력의 인간군이 생”겼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영훈 2007, 21). 곧 식민지 시기에 대해 민족주의 역사관처럼 독립운동이 아니라 “생산과 시장과 신뢰와 법치와 국가의 역사”를 영위했던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다. 이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뉴라이트는 민족주의 역사관의 식민지 수탈론 또는 착취론을 폐기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다.

교과서 포럼은 이러한 시각에 따라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집필했다. 그들은 서문에서 “한국인에게 민족주의는 여전히 소중한 공동체 의식임에 틀림없”지만 “민족주의라는 단일 시각만으로 역사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15)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는 Smith(2001)를 참고하십시오.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누그러뜨리고”, “‘우리 민족’ 대신 ‘한국인’을 역사적 행위의 주체로 설정”했다고 기술했다(교과서 포럼 2008, 5).

그러면 뉴라이트는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족이 근대에 발견된 상상의 공동체라는 점도 이유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근본주의적 명제’이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현행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잘못된 역사관’이 침투해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역사관은 지난 130년간의 근·현대사를 오욕의 역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석과도 같이 아름다운 문화의 조선왕조가 강도 일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후는 민족의 반역자인 친일파들이 활개를 친 시대였습니다. 해방은 또 하나의 점령군인 미국이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친일파들은 재빨리 친미 사대주의자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민족의 분단도, 비극의 한국전쟁도 이들 민족 반역자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1950년대 이승만 정부도, 1960~1970년대의 박정희 정부도 이들이 지배한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경제개발을 했다고 하나 정신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에서 정의는 패배했습니다. 기회주의가 득세한 불의의 역사였습니다(이영훈 2007, 316).

이영훈은 이렇게 현행 교과서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용이 서술되고 “보통의 한국인들이 그에 대해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민족주의를 비판했다.

다음으로 이영훈은 민족주의가 “근본주의적 열정과 감성의 체계”이며 “대한민국을 세계의 선진사회와 선진국가로 발전시키기에 역부족이며,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역사의 족쇄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영훈 2007, 34~35). 곧 “우리 자손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을 풍요하게 만들어나감에 민족주의라는 집단적인 열정의 한계는 너무 명백”하며, 이러한 민족주의의 폐해는 “천황제와 나치즘보다 훨씬 지독한 북한의 북한 수령체제를 통해 추체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영훈 2007, 45).

또한 안병직도 뉴라이트 운동이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시대

적 과제의 첫 번째로 ‘과도한 민족주의’의 극복을 제시했다. 그는 민족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자신의 존재감과 귀속감을 확인하고 열정을 토해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감성의 영역”인 반면 “선진화의 추구는 차가운 이성의 영역”이기에 “여론을 형성하고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는 정치 엘리트나 지식인층이 민족주의 열정에 휘말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안병직 · 이영훈 2008, 325~326).

셋째, 뉴라이트가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는 구체적으로 반미와 반일 민족주의”이기 때문이다. 이영훈은 진보세력이 EU와 FTA 협상을 벌일 때는 조용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데는 반대했다는 점을 근거로 진보세력이 반대하는 것은 FTA가 아니라 미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긍정적 서술로 인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한승조 교수 사태를 근거로 반일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반미, 반일 민족주의를 “병리적인 집단적 정신상태”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자칫하면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의 좋은 토양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병직도 “한국의 반미 감정은 북한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처지에서 보면 일본과 미국을 적대적 관계로 원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북한의 입장이 한국 민중에게 영향을 주어 그동안 민족주의가 맹렬한 위세를 떨쳤는데, 지금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 나머지 그 위세가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주장했다(안병직 · 이영훈 2008, 326~327).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안병직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무분별한 통일운동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영훈은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면 당장은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하고 “2~3년만 버티면 약하고 아쉬운 쪽이 북한이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논의의 칼자루를 올바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같은 아무짝의 소용도 없는 정치 퍼포먼스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통성 없는 권력자와 만나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 수령체제를 승인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안병직 · 이영훈 2008, 328).

한편 신지호는 이러한 민족주의 비판에서 더 나아가 뉴라이트가 탈민족주의,

세계주의를 지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화 시대에 20세기 저항민족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적 불행”이고 “민족주의가 개방보다는 폐쇄, 미래보다는 과거로 기울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민족주의와 과감히 결별을 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계화 시대에는 역시 세계주의가 이념적 대안이 되어야”하지만, “민족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 요소인 소박한 나라사랑의 감정, 즉 애국심은 살려나가는 세계주의” 곧 ‘애국적 세계주의’를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진홍 목사가 민족주의를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주요이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뉴라이트 사상의 특질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판했다(신지호 2006a, 7).

결국 뉴라이트는 민족이 불확실한 실체이고, 민족 통일이라는 근본주의적 인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며,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민족주의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민족주의가 한민족과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인들을 북한 수령체제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이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원칙을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위험한 이념으로 간주되었다.

Ⅲ. 나가는 말: 한국 보수주의에서 뉴라이트의 의미

이상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뉴라이트의 인식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뉴라이트 이념의 특성과 한계, 그리고 그것이 한국 보수주의에서 갖는 의미를 정리한다.

우선 뉴라이트의 이념적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자유민주주의를 자신들의 핵심 이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중시한 이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그리고 정치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였다. 특히 그들은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들이 얼마

나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유주의 인식이 얼마나 협소한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그들이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인 정부로부터 개인의 자유, 곧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노동 3권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들의 자유주의 인식의 또 다른 한계이다.

둘째, 뉴라이트는 엘리트주의적 입장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들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결과 노무현 정부 시기 평등이 만연했고 그 결과 자율이 억압되고 법치주의와 입헌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를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곧 자유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등치시키면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뉴라이트는 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민주주의와 평등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했던 서구 보수주의의 인식과 동일하다. 서구 보수주의자들도 민주주의자들이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무시하며, 인민주권의 명분을 내세워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민주주의의 외양을 갖추었지만 자유주의의 근본 가치를 도외시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주의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병훈 2008, 194~195). 또한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엘리트주의가 깔려 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주의자들은 대중의 정치적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 대신 엘리트가 보다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과잉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억제’를 강조했다(서병훈 2008, 194). 비록 뉴라이트가 표면적으로 엘리트주의를 내세우지는 않지만 노무현 참여민주주의나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논리는 서구 엘리트주의자들의 견해와 동일하다. 따라서 뉴라이트는 자신들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엘리트주의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부정했다.

셋째, 뉴라이트는 한국 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 민족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지녔다. 그 이유는 민족이 불확실한 실체이고 민족주의가 근본주

의적이고 집단주의적 성격을 가졌고, 민족주의의 폐쇄성이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기존의 민족주의 사관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민족 근본주의적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근현대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한민족과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비판에 소극적이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원칙을 무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보다 개인을, 그리고 민족주의와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대한민국을 중심에 둔 역사인식을 지녀야 하며, 더 나아가 민족주의에서 탈피하여 애국적 세계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가 민족주의를 탈피하여 애국적 세계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우선 그들 내부에도 여전히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이 존재하며, 그들이 주장했던 애국적 세계주의도 전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더 중요한 점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을 중심에 둔 역사인식 역시 통일 민족주의를 포괄하는 또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라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는 분단으로 남북에서 별개의 국가와 국민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한국인은 한민족에 귀속되는 ‘종족적’(ethnic) 정체성(identity)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치적’(political)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자신들만이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 곧 한반도 전체에 대한 충성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뉴라이트의 인식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를 포괄하는 더 큰 의미의 민족주의이다.¹⁶⁾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뉴라이트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민족주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민족주의적 인식을 지녔다.

다음으로 뉴라이트의 등장이 한국 보수주의, 그리고 한국의 이념적 발전에서 지닌 의의를 살펴보자. 첫째, 뉴라이트는 21세기 초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선진화이고, 그 사상적 기초를 자유주의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뉴라이트 운동을 “자유주의를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문화의 모든 방면에 걸쳐 의식적으로

16)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정체성 또는 충성심을 애국주의(patriotism)라고 부르지만 국가 구성원 대부분이 스스로를 하나의 민족이라고 상상(imagine)하는 경우, 양자는 전혀 차이가 없다. 분단 이후 한반도 주민의 정체성의 균열에 대해서는 전재호(2010)를 참고하십시오.

실천해 보고자 하는, 한국사에서 처음 있는 사상운동”이라고 주장했다(안병직·이영훈 2008, 331). 이에 따르면 뉴라이트는 한국에서 보수주의에 (신)자유주의를 처음으로 접목시킨 의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신우파’(New Right)가 신자유주의를 내세웠고,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강요로 도입되었지만 1990년대 김영삼 정부는 ‘국제화’ ‘세계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게다가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진보’ 세력으로 분류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개했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 뉴라이트가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것은 이미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던 이념을 ‘뒤늦게’ 수용한 것일 뿐이다.

둘째, 뉴라이트는 기존의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탈민족주의 또는 애국적 세계주의를 주장했다. 특히 역사적 유산과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일반적 흐름과 달리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합되는 애국적 세계주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뉴라이트는 일견 한국 보수주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뉴라이트는 통일과 남북화해를 지향하는 세력들을 공격하기 위해 민족주의의 탈피를 주장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들 중 상당수는 통일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강조하는 대한민국 중심의 역사인식은 정치적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주의를 넘어서지도, 그리고 애국적 세계주의를 향해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뉴라이트는 올드라이트를 비판하면서 ‘수세적인 반공절대주의’에서 벗어나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지하고 참여했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반공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국내외에서 전개되었던 북한 인권 및 민주화 요구는 북한을 더 자극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유통일에 대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뉴라이트의 인식이 실질적으로는 올드라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북한을 사후적으로 규탄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보수세력과 달리 인권과 민주화라는 ‘보편적’ 의제를 동원하여 북한을 공세적으

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기존 반공주의와 차별성을 지녔다.

결국 뉴라이트는 반공절대주의와 중상주의적 발전주의를 특징으로 했던 한국 보수주의를 혁신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념이나 행동 모두에서 기존의 보수 세력과 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대한민국 중심의 역사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보수세력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보편 이념을 동원하여 북한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반공주의의 강조점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한국 보수주의에 변화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강정인. 2009.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서울: 후마니타스.

교과서포럼. 2005. 『한국 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서울: 두레시대.

교과서포럼. 2008.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서울: 기파랑.

김병근. 2011.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성.” 『역사비평』 95, 8-35.

안세영 외. 2007. 『2008 뉴라이트 한국 보고서』. 서울: 뉴라이트.

류근일·홍진표. 2005. 『지성과 반지성』. 서울: 기파랑.

민병호·나기환. 2007. 『뉴라이트가 세상을 바꾼다』. 서울: 예아름.

박세일. 2008. 『대한민국 국가전략』. 서울: 21세기북스.

서병훈. 2008. 『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서울: 책세상.

신지호. 2006a. “뉴라이트 운동의 전개와 사상적 특징.” 『시대정신』 가을호.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0603&num=31> (검색일 2014. 4. 7).

신지호. 2006b. 『뉴라이트의 세상 읽기』. 서울: 기파랑.

안병직·이영훈. 2008.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서울: 기파랑.

안병진. 2004. 『노무현과 클린턴의 탄핵 정치학』. 서울: 푸른길.

안병진. 2008.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보수주의 위기의 뿌리』. 서울: 풀빛.

앤드류 헤이우드. 조현수 역. 2009.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엘버트 O. 허시먼. 이근영 역. 2010.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역사교육연대회의. 2009.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서울: 서해문집.

이영훈. 2007. 『대한민국 이야기』. 서울: 기파랑.

이윤희. 2005. “대응사회운동(Countermovement)의 사회적 역할.” 『담론 201』 8:1, 5-31.

전재호. 2010.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인식 갈등 연구: 한국민족주의의 균열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6:3, 159-191.

정상호. 2008. “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뉴라이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3, 167-189.

정해구. 2006. “뉴라이트운동의 현실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75, 215-237.

주용중. 2011. “추락한 뉴라이트의 대안은 뭔가.” 『조선일보』. 3월 24일.

최홍재. 2007. “뉴라이트는 반제, 반수령,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뿐.” 『시대정신』 35, 114-128.

- 한윤형. 2009. 『뉴라이트 사용후기: 상식인을 위한 역사전쟁 관전기』. 서울: 개마고원.
- 한윤형. 2012. “뉴라이트는 어떻게 사용됐나.” 『위클리경향』. 983호.
- 함재봉. 1999. “한국 보수주의와 유교.” 김병국 외. 『한국의 보수주의』. 서울: 인간사랑.
- 홍진표. 2009. “뉴라이트의 추락과 재생.” 『시대정신』 45.
-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0904&num=338> (검색일 2014. 4. 7).

Anthony D. Smith. 2001. *Nationalism*. Polity.

투고일: 2014.03.02. 심사일: 2014.04.01. 게재확정일: 2014.04.07.
--

【ABSTRACT】

A Study on the Ideological Character of Korean Conservatism in the 2000s: With a Focus on the New Right

Jeon, Jae Ho | Sogang University

The New Right emerged on the South Korean political scene in the mid-2000s as a force representing self-proclaimed radical reformers of the existing conservative power. We can summarize their ideological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in advocating liberal democracy, they emphasized the economic rather than the political aspect of liberalism, ultimately placing a blind trust in neo-liberalism; Second, they were elitists, critical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nunciatory of democratic equality; Third, although they argued for the abolishment of the nationalism often equated with national unification, they were also politically nationalistic in their emphasis on the primacy of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unified Korea; Fourth, they mobilized universal norms like human rights and democracy to criticize North Korea, shifting the focus of anti-communist discourse. Among these four characteristics of the New Righ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two and the existing conservative power's stance, whereas the third and fourth showed several degrees of departure. Based on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the New Right in Korea brought only a small degree of change rather than radical reform.

Key Words | New Right, Conservatism, Neoliberalism, Post-nationalism, anti-liberal democracy